

광주·전남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현황 보니

전국의 14.7%… 사회지도층 다수 포함

회사원 가장 많아…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경찰 順

감사원이 민주당에 제출한 쌀 소득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4만1천824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가운데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 제출 명단=감사원이 민주당에 제출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는 총 28만347명이다. 지난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을 집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제출한 28만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 특성상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소작을 했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 특위 위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감사원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현황=민주당이 제출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은 광역별로 분석한 결과, 광주는 6천55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3만5천769명으로 전체의 12.6%로 집계됐다. 광주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가운데 대구(7천335명 2.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청남도(4만1천829명, 14.8%), 경기도(4만1천532명, 14.7%), 경상북도(3만8천447명, 13.8%)에 네 번째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도인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수에 비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가 많은 편”이라며 “그러나 전남이 농도인데다 광주도 전남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직업별 현황=광주·전남지역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가운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2천25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무원(본인 및 가족 수령)이 6천69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공무원이 1천126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남지역 공무원은 4천943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가운데는 지방공무원이 2천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공무원이 1천808명, 경찰 630명 순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금융계와 전문직 종사자 등도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 가량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로 분류됐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 2006년 광주·전남 공직자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현황 | | | | |
|----------------------------------|-------|-------|-------|-------|
| 구분 | 본인 수령 | 기족 수령 | 계 | |
| 광 주 | 공기업 | 64 | 169 | 233 |
| | 경찰 | 2 | 12 | 14 |
| | 경찰 | 24 | 79 | 103 |
| | 교육 | 198 | 296 | 494 |
| | 국가공무원 | 24 | 94 | 118 |
| | 군인 | 14 | 68 | 82 |
| | 임법부 | - | 1 | 1 |
| | 서법부 | 3 | 12 | 15 |
| | 지방공무원 | 108 | 177 | 285 |
| | 기타 | 2 | 12 | 14 |
| 소 계 | | 439 | 920 | 1,359 |
| 전 남 | | 144 | 906 | 1,050 |
| 경찰 | | - | 53 | 53 |
| 경찰 | | 46 | 548 | 594 |
| 교육 | | 229 | 1,085 | 1,314 |
| 국가공무원 | | 47 | 474 | 521 |
| 군인 | | 13 | 392 | 405 |
| 선관위 | | 1 | 11 | 12 |
| 임법부 | | 2 | 4 | 6 |
| 서법부 | | - | 60 | 60 |
| 지방공무원 | | 504 | 1,402 | 1,906 |
| 기타 | | 2 | 70 | 72 |
| 소 계 | | 988 | 5,005 | 5,993 |

※영농실적 증빙자료 없는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명단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일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예산안 조정 난항… 6년째 법정시한 넘겨

현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도 여·야는 이견을 좁힐지 못해 예산 심의 과정은 지속됐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지난 2003년 이래 6년째다.

한나라당 이사장, 민주당 우재창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특위 간사협의를 갖고 계수조정소위 운영 방안과 일정을 협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

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건의 핵심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차이, 민주당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안 재조정 ▲부자 감세 법안 철회 ▲지방재정 대책 ▲일자리 대책 등 4대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 제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보이콧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치부한 채 정기국회 회기인 9월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쪽 심사’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자유선진당도 민주당에 대한 실적 노력 을 주문하면서 불참 의사를 밝혀 계수조정소위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이날 예정대로 계수조정소위를 개최했으나 민주당에 대한 대응방안만 논의했을 뿐 세대로 된 심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행정구역 개편 공방

행안위 공청회… 행정 체계 단총화 방안·도체계 유지 등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가진 공청회에서는 현행 3단계 행정 체계의 단층화 방안 및 도체계 유지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현행 도체계를 유지할지, 도를 유지하지 않고 단일 계층으로 40~50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둘지가 핵심”이라며 “단층제로 광역자치단체가 많아질 경우 중앙 기관에서 40~50개의 기관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행정효율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또 하나의 기구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권경숙 의원은 “현재 지자체는 자치 사무의 27%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중앙에 종속돼 있다”면서 “현실적 대안은 도를

국가 사무를 통합해 추진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의 자체 사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조 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행정 체계 개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당위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편의 효과가 어떤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렵게 입증됐는지 논거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고 행정구역 개편 자체에 부정적 입장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일부에서 일본의 도주제나 한국의 광역 분권형 모델이 자칫 연방주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기초단체의 활동 영역을 위축시켜 지방자치의 본질적 성격을 악화시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광역

화와 관련한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전남대 안영진 교수는 “우리나라도 도는 준연방형 형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체계 개편 과정에 지역 주민의 절차적 참여도 보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특별법 하나로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부분을 개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방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현 행정 체계는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세계적인 행정구역 광역화 경향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단층제 개편의 경우 세계적인 광역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급물살 탄다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통합한 기구로,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총 10명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숙자(60) 속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정선(57) 연세대 법학과 교수(이상 대통령 위촉), 오재일(56·사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안재현(60) 충북도립대학장, 이강우(55) 국회의장 전무, 윤동일(54)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강장석(55) 국민대 정

치대학원 부원장, 김휘동(64) 안동시장, 고용길(52) 충북 시군의장협의회장(이상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이 위촉됐다. 또 당연직 정부부위원장으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7대 분야, 20개 분권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검토, 국무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과제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 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체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재정 확충, 지방교부세제 개선 등이 올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 * 교과교육학 학습방법론 강의

*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논술 첨삭지도 실시

국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국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야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 완성)

똑똑한 강의 선택!
한 번 배워 평생가는
학습방법론 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국내영 선생 저자직강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view.net

에듀뷰넷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 비전 임용시험제도 인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http://www.naeyoung.com

▶국내영고시학원 수강 문의 광주 (代)529-009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2월 1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주부반·성인반
(주간반·야간반)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학습과정
개정판(2009)본 월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4F
첨단점 ☎ 971-0002 구미마트 첨단점 앞 광주은행 4F

국비지원원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無等은 지금도 옛 명성 그대로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들고 있다.(청강환영)=

7·9 금 공무원 합격 대비

● 직종 행 교 세 관 법 검 철 출 교 보 보 복 소 기

● 30~40대 주부 특별반모집 ●

- 학업설명회, 매일 09~19시까지-

'09년 시험안내